송미령 "물가안정 위해 자체할인 등 업체 적극적 동참 절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울 대형마트 과일소매가 등 점검
주요 농축산물·가공식품 물가 살펴
할인지원 등 체감 가격 부담 낮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유통·식품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자체할인 행사 등을 통한 과일 등 농산물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치솟은 사과·배 등의 과일 값 안정화를 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농협창동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농협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살펴본 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자체 할인 행사, 가격 인하 노력 등 유통 및 식품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또 동행한 농협 및 마트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식품분야 물가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물가 안정 관련 농협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204억 원), 할인 지원(230억 원) 등 체감 가격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비정형과(못난이과일) 공급, 수입과일 도입 등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식품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 이슈를 청취·해결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할 계획이다.

농협 역시 정부 물가 정책에 부응해 하나로마트의 전국 판매망을 활용한 자체 특별판매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5대강 지류 등 전국 하천 특별점검

환경부, 오늘부터 3주간 점검나서
제방·호안 유지관리·수문 작동 등
위험요소 발견시 4월 말까지 보수

환경부가 오는 11일부터 3주간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 점검에 나선다. 해빙기를 맞아 여름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이번 점검에서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하천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다고 10일 밝혔다.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국가하천의 경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이 맡는다. 또 5대강 외 국가하천은 관할 지자체, 다기능보는 한국수자원공사, 하천 수문조사시설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하게 된다.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비롯해 △제방에 딸린 수문 및 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7월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 우곤제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응급 보수 및 보강 등의 개선조치를 완료해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올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에 조치가 어려운 구간이나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의 취약구간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연중 관리한다.

지정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홍수기 전·중·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구별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을 통해 홍수정보의 상호 제공, 위험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 계획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은 홍수기 전까지 신속히 보완 조치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3월 15일까지 신고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근로복지공단은 10일 건설업을 제외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에 신고한 20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0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대금 후려치기' 등 하도급 갑질 적발

공정위, 비엔에이치에 17억 과징금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거나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각종 하도급 갑질을 일삼은 산업 설비·시공업체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비엔에이치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남 판교에 본사를 둔 비엔에이치는 1977년 4월 창립한 산업 분야 시스템 설계 시공업체로 2022년 매출액은 1200억원 수준이다.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는 △하도급서면 지연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구매 강제 △부당한 위탁 취소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등 8가지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2019.8~2020.8)',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12~2020.11)',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4~2020.12)'를 위탁하면서 이같은 갑질을 벌였다.

우선 비엔에이치는 해당 사건 공사 착수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했으며,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관련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18억9500만원인데, 이보다 낮은 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에서는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인 83억3900만원보다 낮은 80억 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수의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 항목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행위, 경쟁입찰 하도급계약에서 최저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누수사고 대비 공공폐수처리 운영 강화

환경부, 운영관리 지침 지자체 배포

환경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지침으로, 노후 폐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으로,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담당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직업능력 개발 공로 유공자 찾습니다"

고용부, 내달 11일까지 후보자 추천

고용노동부는 '2024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계획'을 11일 공고하고 내달 11일까지 포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숙련기술로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노동자나 직업훈련 환경조성에 기여한 사업주 등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1997년 시작해 그간 2721명에 대해 포상했다.

올해는 △사업주 △노동자 △우수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 교원 △HRD·자격업무종사자 등 6개 분야별로 총 95명에게 훈장(3명), 포장(5명), 대통령 표창(11명), 국무총리표창(21명), 장관 표창(55명)을 수여한다.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분야별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직업능력개발과),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지사), 한국폴리텍대학(인사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인재개발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나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추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